

비급여 ‘도수치료’ 진료비 천차만별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의 진료비가 의료기관간 최대 100배 차이가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762곳(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의 비급여 207개 항목의 진료비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공개된 107개 항목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100개 항목이 추가로 공개됐다. 신규공개된 주요항목은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해 신체기능을 높이는 ‘도수치료’, 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압력을 주사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증식치료’, 난임시술(보조생식술) 등이다.

지난해 공개된 진료비가 공개됐던 107개 항목은 비용이 전년과 같거나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체온열검사(부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최저금액 5천원부터 최고금액 50만원

분),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제외) 등 6항목의 최빈금액이 인하됐고, 그외 48항목과 제증명수수료 30항목의 기준은 전년과 같았다. 치과보철료 골드크리온(금니) 등 15항목에서 진료비가 인상됐다.

반면 새로 공개된 항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2만~5만원(최빈금액)을 진료비로 받고 있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인 반면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조사됐다.

증식 치료는 최빈 금액이 4만 7000~10만원이지만 최저금액은 5700원, 최고금액은 80만원으로 14

배 차이가 있었다.

보조생식술(난임 시술) 중 ‘일반체외수정’의 최빈 금액은 18만 1560~17만1030원인 데, 최저금액은 10만원, 최고금액은 64만9000원으로 6.5배, ‘자궁경내 정자주입술’은 최빈금액은 16만47000~20만원 수준으로 최저금액은 10만원, 최고금액은 51만3000원 5.1배 차이다.

이와 함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진단료 중 ‘무릎관절’, ‘견관절’ 부위는 최빈금액이 40만~54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최저·최고 금액은 각각 20만원과 86만원으로 4.3배, 20만원과 80만6000원으로 4배의 차 이를 보였다.

임산부에게 중요한 ‘루벨라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는 풍진 항체검사가 양성인 경우 감염시기를 판별하는 검사로 최빈금액은 4~5만 원, 최저·최고금액은 1만 3240원과 7만원으로 5.3배다.

급성 열성 전염병인 말라리아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말라리아 항원검사(간이)’의 최빈금액은 2~3만 원, 최저·최고금액은 6000원과 5만원으로 8.3배다.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6만7000원으로 최대 26.7배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최대 절반 이상 감소하고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 차이도 없어지게 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방법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

병원 남녀공용 화장실·탈의실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화장실 및 탈의실을 남녀공용으로 운영해 오던 보훈병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보훈병원에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환자 B씨의 아들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인공신장실 내 화장실과 탈의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B씨의 아들은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들은 짧시간 병원 인공신장실 내에 머물게 되는데, 남녀공용 화장실 및 탈의실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진정을 제출했다.

특히 인공신장실 내 남녀공용화장실 입구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를 위해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B씨의 아들은 남녀공용화장실에 설치된 시워기로 어머니 B씨 몸을 씻기고 있던 중, 다른 남성 환자가 들어와 그 상황을 보게됐다고도 전했다.

또한 탈의실 및 대기실도 남녀공용이라 여성 환자들의 경우 화장실 또는 병실에서 커튼을 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문제제기 및 개선 요청이 있었음에도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았다며 “수지심과 불편함을 감내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가보훈처장에게도 시설 개선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벚꽃 활짝 봄나들이 1일 오전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인근 낙동제방 벚꽃길을 찾은 한 부녀가 봄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산업단지 불법 입주 가상화폐 채굴 13개 업체 적발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전기료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해 불법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채굴작업을 벌인 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별도의 임차계약 없이 불법 입주한 뒤 가상화폐 채굴업을 한 13개 업체를 적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된 업체는 나노신단 내 3

곳·평동신단 내 3곳·진곡신단 내 1곳·하남신단 내 6곳이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5월부터 각각의 산업단지 내 공장 일부(330~992㎡ 규모)를 입주한 뒤 100~350여 대의 컴퓨터를 설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작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 채굴업 자체는 협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제조업으로 용도가 한정된 산업단지에서는 관리기관과 입주 가능 업종 여부 확인 및 입주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이들 업체가 산업단지를 택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일반용보다 10% 가량 저렴한 산업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다 공장부지도 값싼 가격에 순쉽게 임대할 수 있는 등 일반 건물 대비 운영비를 절감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내 산단을 중심으로 지난 두 달 동안 단속을 벌였다. 앞으로도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열로우
시티
장성군

장성에서 쉼하세요.
숲과 호수의 정취를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장성호 수변길

장성서 산불 발생 2시간30분만에 진화

장성에서 산불이 발생해 2시간30여분만에 진화됐다.

지난달 31일 오후 3시30분께 장성군 북일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은 산림 등 0.3㏊를 태웠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과 소방헬기 공무원 등 20여명에 의해 2시30여분 만인 오후 6시께 진화됐다.

불은 민가와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은 비류에 의해 불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당국은 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점으로 미뤄 입산자에 의한 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장성=반정모 기자

장흥서 승용차량 교통사고 6명 사상

지난달 31일 낮 12시21분께 장흥군 장흥읍 한 교차로에서 A(30)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B(67)씨의 승용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C(32·여)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운전자 A씨도 크게 다쳤다.

또 B씨와 동승자 3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흥=김홍필 기자

농기계 밑에서 50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무안의 밭, 농기계 밑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9시22분께 무안군 망운면 A(58)씨의 밭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경찰 등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트레터 밑에 누운 채 있었으며 특별한 외상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족들은 A씨가 “밭에 일을 하려 가겠다”고 집을 나간 뒤 늦은 시간 까지 돌아오지 않아 찾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CCTV 등을 토대로 이 날 행적 등도 살펴보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가짜 부동산사무소 운영 계약금 가로챈 일당

대여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가짜 부동산을 운영, 임대부동산의 소유주 행세를 하며 전세계약금 수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가짜 부동산 사무소 소장 A(39)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외국으로 출국한 일당 B(39)씨를 뒤쫓는 한편, 이들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C(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C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월 60만원을 주고 대여한 뒤 부산에서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했다.

이들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해 부동산 중개앱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신혼부부 등 14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총 8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대한 부동산 명의자의 아들인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위·변조하고, 부동산이 거래를 보증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충북 지자체 4급 공무원 만취운전 덜미

충북 한 지자체 간부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1일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 44분 단양군 폐포읍 적성면 한 도로에서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 A(4급)씨가 헬증알코올농도 0.108% 면허취소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 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다.